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자에게 지정된 사실만을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미리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 ③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술훈련을 명할 수 있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는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나)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다)까지 (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1월 31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②	국무총리	대통령	1월 31일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2월 말일	행정안전부장관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2월 말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가)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나) 이내

- | <u>(가)</u> | <u>(나)</u> |
|------------|------------|
| ① 10일 | 60일 |
| ② 10일 | 90일 |
| ③ 14일 | 60일 |
| ④ 14일 | 90일 |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④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 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 ㄷ. 동시관리훈련을 포함하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 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9. A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 甲과 乙에게 인력의 참여 협력에 대한 동의를 문서로 받았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참여 협력 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甲이 1주일 참여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甲이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 ③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乙이 1일 참여한 경우에 乙에게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甲과 乙이 참여하고 있던 중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甲과 乙의 참여는 중지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참여를 연장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정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③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
-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이 작성된 경우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중앙관서의 장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다.
 ㄴ. 기본 계획 지침에는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한다.
 ㄹ.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에는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③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점유자에게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없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 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② 장애 보상금 중 5급 장애등급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사망 보상금의 7/12의 금액이다.
- ③ 읍·면·동장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보상금 지급 중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표 중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눈이 실명[맹(盲) 또는 광각상실(光角喪失)]되거나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 ③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④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 실비변상 등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가)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나)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다)을/를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①	2	20	10
②	2	30	10
③	3	30	15
④	3	30	20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210일 이내인 비상근 예비군을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한다.
- ㄴ. 비상근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은 이들의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 ㄷ.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상근 예비군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 예비군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ㄹ. 평시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 20.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 출동한 예비군은 무장공비의 소멸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상 물품 관리관으로 본다.
-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가)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나)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다) 전까지, 단 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 (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6일	30일	10일	3일
②	6일	20일	10일	5일
③	7일	30일	12일	3일
④	7일	20일	12일	5일

문 22. 예비군법령상 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이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소속 예비군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예비군대원에게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조명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 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면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하면 된다.
- ㄷ.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긴급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문 26. 예비군법령상 재해 또는 휴업보상금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ㄴ. 예비군대원 A가 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던 중 10일이 지나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ㄷ.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 ㄹ.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ㄴ.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ㄷ.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에서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 ㅁ.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인 사람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없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 ③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며,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④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된다.
- 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ㄷ.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ㄹ.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시설 분야’는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②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는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③ ‘생활 및 여가 분야’는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 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 각종 공사장에서의 주변 시설물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④ ‘보건·식품 분야’는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자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 ④ 지역안전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책조정 위원회의 사무(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ㄴ.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ㄷ.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ㄹ.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ㅁ.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
|---|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재난방송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하며,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ㄷ.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원봉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 때 반환금의 징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법령 I - 헌법

문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2.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③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문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 기간 동안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연금 환수처분이 이루어졌고, 환수처분의 후행처분으로 압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조항도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④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문 4. 의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중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문 5.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한다.
-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소송을 관할하며,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을 관할한다.

문 6. 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해산,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며, 탄핵심판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해산을 심판하며,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 문 7.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근로기준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마련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④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제6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 ②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치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문 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가석방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문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의2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
 - ②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 ③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
 - ④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문 11.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 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등의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 등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②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 본문 중 '승급'에 관한 부분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면 정기승급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봉급 상승을 얻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된다.
- ③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문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를 전소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에 비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가를 낮게 정함으로써 양 소송의 소가를 달리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ㄴ.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부분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ㄷ.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이, 행정기관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ㄹ.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 정한 「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진열·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진열·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ㄴ.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제2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ㄷ.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ㄹ.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중 ‘제90조제1항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4.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부분이, 접견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
- ②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6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부분 및 같은 지침 제133조 중 제126조에 해당하는 민원인 가운데 배우자 부분은, 수형자의 배우자와 미결수용자의 배우자 사이에 차별을 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1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장기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므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